

하고 있는 아그파포토의 고부가가치 요소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효성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인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성이 그 동안 그룹 신성장 사업분야로 적극 추진해 온 산업용 소재사업의 결실로 향후 고기능성 필름, 코팅 제품 등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사업확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지난 3월 중국 강소성 소재 남통우방 변압기社를 인수, 중국 송배전 시장 내에서 중전기 사업을 확대해 향후 중국 내 3대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룹의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아그파포토社는 2004년 11월 모회사인 아그파게버트사(Agfa-Gevaert AG)의 소비자영상사업부(카메라 필름 및 인화장비 사업)가 다국적 투자펀드에 매각, 독립한 회사이다.

필름 인화장비 사업을 떠난 ‘아그파’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그파포토社와는 별개 회사이다. 경영난으로 2005년 5월 27일 아그파포토社는 독일 쾰른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보유자산을 분리 매각해왔다.

환경부
장품유리병 재활용 품목 추가
 확장품유리병 2007년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이치범)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

면서 재활용되지 못했던 알칼리망간전지와 화장품유리병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분리수거 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및 침출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전지류와 관련해 국민의 분리배출 요구가 증대돼 왔으며, 최근 일부 수입 전지류에서 유해물질(납, 카드뮴) 함유량이 국내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재활용 등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부 수입산은 국내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사용량 중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수는 1ppm, 카드뮴 10ppm)보다 납 2배, 카드뮴 12배 높게 검출된 바 있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품목인 화장품유리병은 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일부는 분리수거 대상에 혼입배출 돼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재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는 EPR 대상 품목이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전지는 관련 조합에 의해 자율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전지 사용량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알칼리망간전지 등이 분리 수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전지류가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며, 그 동안 매립·소각 위주로 처리됐던 전지류가 상당부분 재활용됨으

정책기관

로써 중금속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수거된 전지류에서 유가금속 등을 회수해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유독물 용기 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유리병 포장재가 분리수거 대상이 돼 분리배출 품목 구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유리병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수거체계가 이미 구축된 화장품유리병은 2007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전지류는 2007년도에 분리수거 구축사업 및 일부 지역에서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동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금년 6월말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농림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정 인삼 포장단위 다양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태극삼·백삼본삼은 75·1백50·3백·6백g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 달 12일부터는 다양한 포장단위로 판매가 가능해 졌다.

그동안 인삼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성·규격 등을 검사해 합격품만을 판매도록 『인삼산업법』으로 규정하고, 과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포장단위를 검사기준으로서의 포장 단위로 정해

운영해 왔다.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인삼에 대한 관심증가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으로 인삼 포장단위를 다양화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검사관련 규정을 인삼의 포장단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고려인삼 포장단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화 됨으로써 고려인삼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공포 시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등

소비자에게 구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품목 확대 및 수입농산물 판정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령(농림부 고시)을 지난 달 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할 대상품목이 농산물은 참외, 수박 등 15개 품목이 추가, 종전 1백45개품목에서 1백60개로, 가공품은 빵, 카레 등 90개 품목이 추가, 1백21개에서 2백11개로

늘어난다.

이들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 4월 1일부터 원산지의무표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공품에 모든 원료를 국산으로 쓴 제품과 일부만 국산으로 쓴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해 “중자로 수입해 국내토양 재배시 원산지는 「국산」으로 변경”되며, “작물체를 수입해 국내 토양에 단순히 이식 또는 가식해 생산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등 원산지의 변경, 미변경 등 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교통부
국가 물류 인프라 U도입
 RFID 등 9백60억 투입

항공, 항만, 화물 및 농수산물 유통 등 국가 물류 전반에 무선인식(RFID)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농림부 등 물류 관련 정부기관들의 올해 물류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2006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민간에 4천5백4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물류정보화, 표준화, 기술개발 등 물류기술 고도화 부문에 약 9백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와 민간분야의 물류정보가 물 흐르듯이 유통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 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지난 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및 민간분야의 물류정보 현황을 토대로 국가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인천공항물류협업시스템(ACTIS)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지난해 실시한 데 이어 올해 ACTIS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업무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건교부 주도의 물류정보통합활용 서비스 구축사업도 지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건교부는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출항, 통관, 보세화물, 철도운송, 검역정보 등을 공공기관 또는 물류주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수집 가능한 최소한의 화물정보(수출입 행정절차, 거점정보 등)를 이용해 화물의 현재위치를 알고자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최대한 가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RFID 기반의 지능형 통합물류체계 구축작업을 진행한다.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 자동화, 컨테이너 추적 등 U-포트 도입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게이트, ICD 및 철도CY

정책기관

등과 GCTS(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 수집 시스템) 센터를 연계한 지능형 U-네트워크 구성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 육상·철도·항공 등 분야별 물류표준화와, 포장·수송·보관·운반하역 등 단계별 물류표준화 세부방안 및 부처별 역할분담체계를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미래형 물류기술 개발을 위해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전자물류시스템 기술 개발, RFID 기반 상품라이프사이클 물류정보통합관리 솔루션 기술개발 등을 진행한다.

정보통신부

마크 로 개편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마크 표시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는 지난 1996년부터 운영해온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NEP(신제품 인증)'로 개편했다고 지난



▲ 우수신제품 마크 NEP

달 9일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한 브랜드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는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분리했으며, NEP는 정보통신부(IT분야)와 산업자원부(비 IT분야)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NEP 제도는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NEP 인증을 받으면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신제품의 우수성을 공인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및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품 등에 선정 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실용화전략가이드 발간

정부 표준정책협의체도 출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RFID 실용화에 있어 '표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실용화에서 '표준'이 중시되는 것은, 전자 태그·리더기·시스템의 정확도·신뢰도 등의 성능이 국제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글로벌 상호운용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RFID 관련 ISO 국제표준동향, KS 규격 제정 내용, RFID 도입에서 기회와 도전이 예상되는 극복 과제 등을 정리한 <RFID기술표준 및 실용화 전략 가이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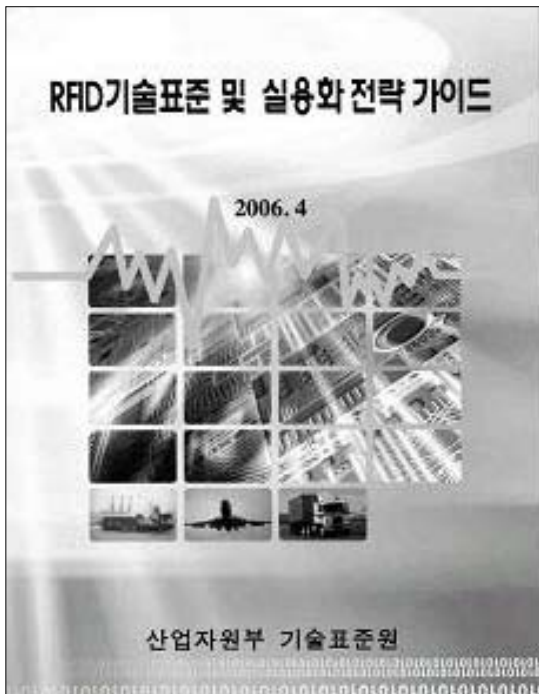
RFID 관련 사업자와 정책입안자, 일반인들의 RFID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 및 입문서 역할을 하게 될 이번 '전략가이드'에는, 국제표준화 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술분과위원회(SC31)가 제정한 RFID용 통신프로토콜데이

터 및 시험성능 등에 대한 표준정보가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국제표준단체인 EPC global(통합제품 코드(UPC) 관련 글로벌 컨소시엄 회사)에서 추진 중인 EPC표준작업 동향과 ISO에서 작업중인 물류공급망용(SCM) 국제용용표준 및 전자봉인(e-Seal)의 표준화 동향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 RFID 시스템 중 특히 수익성이 기대되는 원자재의 정확한 재고관리, 톨게이트의 요금 자동징수, 제품의 소급성 및 검증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꼭 필요한 핵심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예산·기술부족·정보부재 등 중소기업이 RFID 시스템 채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개인 신상정보 보안 등의 문제점 분석, 미국 상무부의 RFID 실용화 추진정책 보고서(번역)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RFID의 표준 이슈가 각 부처 RFID 사업 및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 부처 차원의 'RFID 표준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실용화전략가이드 발간

식약청 의약품 낱알표시제 확대 실시 소포장 용기까지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의약품 낱알표시가 앰플, 바이알 등 비교적 면적이 적은 소포장 의약품 용기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관리팀 김명정 사무관은 의약품 낱알표

정책기관

시가 소포장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이유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낱알표시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며 “제약사의 소포장 의약품 확대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낱알표시 개선안은 우선 낱알모음 포장과 앰플, 바이알 등 면적이 적은 용기에도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근육주사와 정맥주사의 오투약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식별표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용기포장규정 개정 고시

포장 ‘소아용의약품’ 정의 신설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 품목을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06. 2. 24)에서 지정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약사법시행규칙을 명확히 하고자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06. 2. 24)에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목적 수정함(제1조) △ 안전용기·포장 정의에 ‘소아용의약품’ 정의 신설(제2조) △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06. 2. 24)에서 정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품목지정을 삭제함

△ 안전용기·포장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고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재봉합용기에 대한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함(제3조)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소아용의약품 및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을 정했다.

개정안은 ‘소아용의약품’은 주로 11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전용기·포장의 경우 1회용포장은 허가(신고)된 용법 용량에 의해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것(예 : 1회 복용량이 1포 또는 2정인 경우, 1포씩 또는 2정씩 포장한 것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포장은 5세 이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고시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의 재봉합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 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또는 구두 설명 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 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으로 명시했다.

식약청

6개식품 HACCP 자율추진단 구성

영업자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올해 12월 1일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

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연매출액 및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 HACC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HACCP 의무화 추진을 정부 주도형에서 업계 참여 자율추진으로 혁신하기 위해 『6개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무적용 대상 6개 식품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이며 6개 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은 1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소(연매출액 20억 이상, 종업원수 51인 이상)를 중심으로 추진단장, 부단장, 기술지원역(HACCP 지정업소 HACCP 팀장), 기술고문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식품별 “자율추진단”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지역회의 및 총회를 통해 HACCP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하고,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 및 HACCP PLAN 기준서 작성에 대한 기술을 공유해 HACCP 미지정업소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식약청에서는 자율추진단에서 자체 해결 곤란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6개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1단계 HACCP 의무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2012년까지 4단계의 의무적용을 완수해 HACCP 지정업소 확대 및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

품의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적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용체계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 6개 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을 병행하는 체계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기준팀(전화 02-380-1347)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중기 활성화 대책 부심
지난 달 13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각급 조합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업종별 대표단체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3일 이기우 중소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주요 협동조합 전무이사 간담회에서 이기우 국장은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에 협동조합이 명실상부한 업종의 구심체 역할을 지속 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 TF팀을 구성했으며, 공동사업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성공 가능한 사업을 찾기 위해 전무이사 간담회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골판지포장조합, 기계연합회, 금속조합, 조명조합, 전산업조합, 재활용범퍼조합전

정책기관

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기계연합회 성낙중 전무이사는 중소기업 전문 공제기금을 신설하여 입찰 및 하자보증 등을 수행한다면 중소기업계의 판로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타 업종별 공동 보증 및 신용카드 발행 등이 지원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그동안 중기청이나 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 등을 개별 기업과 직접 상대함으로써 업종별 협동조합의 기능을 본의 아니게 약화시켜 왔으며, 그러한 인식이 재고되지 않는 한 중기청과 협동조합간의 괴리감을 극복시키지 못할 거라는 지적을 한 뒤, 업종별로 조직화된 협동조합이야말로 정부 정책을 전파하고 여론을 모아내는 최적의 구심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공동창고신설과 연구시험실 지원(골판지포장조합, 조명조합), 하자지원센터 설립(전산업조합), 공제조합 설립(기계연합회, 전산업조합),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금속조합, 조명조합), 협동조합 추천 정책자금 지원신설(재활용범퍼조합)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식약청 보고서, 표절 의혹 공정성 검토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대한약사회 한 간부의 석사 학위 논문을 30여쪽이나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은 의사·약사·제약회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달 13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약청에서 2005년 11월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한약사회 간부의 석사 학위 논문을 33쪽이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 연구’라는 이 보고서의 표절 부분은 ‘포장실태 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기초 데이터로 용역 보고서의 결론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 보고서는 식약청이 2005년 6월 한국 의약품법규학회에 3천만원을 주고 의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약품법규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심창구 전 식약청장으로 돼 있다. 심창구 전 식약청장은 2004년 8월 ‘PPA 감기약 파문’을 계기로 사임했었다.

한편 이 보고서에 전재된 논문은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이 지난해 4월 작성해 같은 해 6월 석사 학위를 받았던 ‘보험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으로 이 논문의 31~67쪽이 식약청의 보고서 10~42쪽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은 의사·약사·제약회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규정

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간부의 석사 논문이 그대로 전재돼 제출된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대한약사회의 석사 논문이 그대로 전재된 보고서를 검증 없이 채택해 발표한 식약청이 과연 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야기된다"며 "이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론의 공정성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이번달부터 시행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번달부터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 통관 뒤 포장을 새로해 국내산 둔갑 행위를 없애기 위해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단계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강화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매월 원산지표시 위반실적을 분석해 우범품목·업체에 대한 수출입검사비용을 현행 5%에서 10~100%로 크게 늘렸다"면서 "또한 원산지표시를 바꿔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관 후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지정 보세구역으로 반입, 세관원 감독아래 시정조치하고 반출시킬 것"이라면서 "보세구역반입명령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반입명령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4분기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관세환급에서 인터넷 관세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 첫달인 지난해 10월말 2.1%(2백91건)에서 올 3월말 현재 21.5%(5천7백5건)로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휘발유 플라스틱 용기 규제 완화
미자격 운송자 운행 과태료 하향 조정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휘발유를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 운반하는 경우 허용기준을 현행 10리터에서 20리터로 상향조정하는 등 민생관련 위험물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1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또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운송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로 휘발유를 운반하려면 용량 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위험물 경고표시 부착 의무 등 다른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며 무자격자가 위험물 이동탱크를 운송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